

2야 '증인채택 이견'에 새누리 부채질

더민주 "여당 같은 주장 충격"… 박지원 "더민주 강경파들이 반대"… 정진석 "강경세력, 여야합의 파기"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3일 국민의당 주장을 옹호하고 더민주를 비난하면서 야당 분란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더민주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탁 트리오를 서별관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일부 증인을 제외하는 대신 연석회의 청문회를 진행,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박원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어제 (협상에서) 말한 것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청문회 증인에서) 다 빼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청문회 없

이 막대한 수조원의 혈세를 넣자는 것에서 (국민의당이)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충격이었다"고 국민의당을 공개 비난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당은 증재인이라고 했지만 서별관 회의 최종 책임자인 최경환 의원을 빼고 하지는 (국민의당의) 얘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를 끝내고 증인채택 협상을 계속하고 마지막에 일괄타결하면 된다"며 "예결위도,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결국 경제만 파탄난다. 두당은 우리 제안을 꼭 수용해서 추경도 청문회도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증인 채택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경을 위해 우리가 (일부 증인의 채택을) 양보할 용의

도 있다고 밝혔는데 더민주에서 안 된다 고 하면 (성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더민주 강경파들을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더민주 의원총회를 보면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이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대선 고지 만드는 길에 진지를 하나 더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강경세력이 제 1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완전히 친노 강경 세력들에 의해 (여야) 합의가 원천 파기되고 원천 무효가 됐다"며 더민주에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당내 강경세력들이 흔들어대면 대국민 약속도 그냥 (파기하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고도 수권을 꿈꾸느냐"고 친노 강경파를 거론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우리 입장에 오키했다"며 "결국 더민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사실 야당 수석들도 최 의원, 안 수석 두 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민주도 그 안을 포함해 의총에서 논의한 것 아니냐"고 더민주 비난에 가세했다. /뉴시스

정운천 "새만금 남북2축도로 예산 314억 확보"

국회 정운천(새누리당,전주) 의원은 23일 새누리당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만금 숙원사업이었던 남북2축도로 예산 31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2축도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동서2축도로와 십자형 입체도로를 형성해 새만금 SOC구축은 물론 내부개발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남북2축도로의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정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남북2축도로의 동시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여당차원에서 새만금특위를 만들어 새만금이 글로벌경제특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정현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정운천·성일홍·권석창 예결위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신광명 기자

박원주 "최경환·안종범 빼자는 국민의당 충격적"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관련, "국민의당이 어제 (협상에서) 말한 것은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청문회 증인에서) 다 빼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청문회 없이 막대한 수조원의 혈세를 넣자는 것에서 (국민의당이)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충격이었다"라며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박원주 "최경환·안종범 빼자는 국민의당 충격적"

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국민의당은 증재인이라고 했지만 서별관 회의 최종 책임자인 최경환 의원을 빼고 하지는 (국민의당의) 얘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주 "최경환·안종범 빼자는 국민의당 충격적"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새누리당이 2명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제 (원내 교섭단체 3당) 수석간 회의를 하거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여당이 전략적으로 설득해 달라.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

더민주 "이석수, 박근령 고발 청와대가 책임지고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국민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령씨 고발은) 1차적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못한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대변인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직분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감찰관 직무를 공공연히 흔들고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발언, "우병우 사퇴" 등을 정권 흔들기로 규정된 청와대를 비판했다.

기대변인은 "이 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기관을 감찰하라고 임명된 것이니 그 직분에 충실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물이 우 수석과 박근령씨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만든 직책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대통령의 사람이 진행되는 일이다. 수사 진행에 협조하고 관망하는 게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靑, 이석수 흔들기 그만둬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대변인은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미 한 건은 고발 조치 됐고, 나머지 한 건은 감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 특감에 대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만하다"며 "단순히 우 수석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혹여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특감을 무력화시키는 의도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대변인은 "청와대는 특감의 일은 특감에게 맡기고 친인척과 측근 관리에나 힘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대기오염 저감 위한 정책토론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 강력 지지"

이상현 도의원, "교육 능력과 재정 건전성 등 충분한 자격 갖추고 있어"

전북도의회 이상현(남원1) 의원은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수병원유지재단이 교육부에 정상화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가 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서남대학교는 의료나후 지역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대학 폐교는 전북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수병원은 1898년 설립 이후 118년 동안 대한민국 근현대 의료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호남 지역 공공의료와 의학교육의 산 증인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예수병원은 교육 능력과 재정 건전성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서남대 정상화 추진 책임자로 예수



병원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 선정 과정에서는 대학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덧붙여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인력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수병원, 명지병원, 구제단이 제기한 상대방의 이의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광명 기자

이철우 "사드 배치 공개 한민구 사과해야"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공개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무기들은 그동안 공개를 안했다. 사드는 야당이 반대해 이념 문제로 인해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한 것 같다"라며 "그러

나 그 자체가 잘못됐고, (한 장관은)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없다. 주민들이랑 합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다른 무기들도 많이 갖다 놔는데 어디에 얼마나 갖다 놔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게 국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야권, '우병우 버티기' 추석까지 끌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우 수석의 '버티기'를 일정 부분 즐기는 분위기가 감지돼 흥미롭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수석에 대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성 친박을 제외하곤 우 수석 사퇴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할수록 여당 내부의 이견도 더 커지는 양상이다. 야권에게는 우 수석에 대한 공세가 더없는 호재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야권은 우 수석 문제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일정부분 하고 있다. 최소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중순까지 이슈가 계속될 경우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추석발상 민심'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층 확산되거나 나아가 우 수석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대선국면에서까지 야당의 무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히려 우 수석이 달력 사퇴하면 너무 빨리 이슈가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야당은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압박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 담당 상임위원회의인 국회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지 않고 있다.

야당은 과반(28명 중 17명, 더민주 출신 무소속 홍의락 의원 포함)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운영위 개최 조건을 이미 넘겨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영위를 열어 우 수석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 우병우 문제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우병우를 내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오고 버려놓은 큰 수사들이 다 깨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라며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 문제로 청와대가 레임덕에 빠지고 새누리당도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어 야당으로 바뀔 나쁠 것은 없다"고 평했다.

더민주의 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운영위를 개최할 수 있고 운영위 개최 절차를 못 밟을 것도 없다"면서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입장을 선회해서 대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입장에서는 사투르기보다는 우 수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근차근 즐기자는 느낌인 듯 하다. /뉴시스

정진석 "운영위 9월에 열릴 것"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우병우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에 대해 "운영위는 9월에 곧 열린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두 사람 모두 운영위에 동반 출석시킬 것을 제안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운영위 합의가 됐다"며 이에 동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 문제가 논란이 가속화되던 지난날 22일 "그 동안의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줬지만 더 이상 운영위 불출석을 양해해주는 것 어렵다"며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거론하며 우 수석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 퇴진을 공개 촉구했고, 다음 날 청와대가 '우병우 지키기'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우병우 퇴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